

보도자료

보도일시	2014년 7월 22일(화) 조간
담 당 자	김재훈 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 연구위원 (044-550-4123, jaehoonkim@kdi.re.kr) 조성익 KDI 경쟁정책연구부 연구위원 (044-550-4137, sungickcho@kdi.re.kr)
배포일시	2014년 7월 21일(월) 09:00
배포부서	KDI 홍보팀(044-550-4030, press@kdi.re.kr)

민주화, 부존자원,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

김재훈 연구위원 · 조성익 연구위원

- 보도자료는 『정책연구시리즈(2013-03)』 ‘민주화, 부존자원,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’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.

1. 연구 배경 및 의의

- “민주주의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가?” 또는 “경제성장이 궁극적으로 민주화를 촉진하는가?”와 같은 질문들은 단순한 학문적 관심을 넘어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.
- 어떤 정치체제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가의 문제는 Barro(1999)의 기념비적 연구 이후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받아옴.

□ 정치체제가 경제성장을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들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음.

- 재산권보호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명제, 즉 자본주의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검증됨.
- 반면, 민주주의와 독재체제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상반된 주장들이 존재함.
- 보다 구체적으로, 경제성장이 민주화를 이끈다는 연구(Barro, 1999)도 있는 반면, 뚜렷한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는 연구(Acemoglu et al. 2008)도 존재

2. 연구 주요 내용

□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부족한 미시적 기반을 마련하고, 기존 연구에서 간과한 부존자원에 초점을 맞추어 실증분석을 실시함.

- 비민주체제(독재, 권위주의 등)로 시작한 국가가 부존자원 여부에 따라 경제적 불평등, 경제성장 등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, 그에 따라 민주체제로 전환이 가능한지 분석
- 민주체제로 전환한 경우 경제적 불평등, 재분배정책, 경제성장 등은 전환 이후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분석

□ 본 연구는 부존자원에 주목하여, 부존자원이 빈약한 국가에서는 경제성장이 민주화를 이끌지만 부존자원이 풍부한 국가에서는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는 것을 국제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입증

- 경제성장과 민주화에 관한 수많은 기존연구들이 대상국가의 부존자원 여부에는 소홀하였다는 점에 착안

- 부존자원이 부족한 국가의 경제성장은 필연적으로 인적자원 활용과 개방을 통한 국제교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.
- 일단 경제를 개방하면, 국가의 경제에 대한 통제를 지속하기 어렵고, 결국 개별 경제주체들의 자발적 경제활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.
- 개발도상국 내 경제적 불평등이 일정수준에 이르면 체제전환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며 이에 따라 민주화가 진행됨.
- 반면 부존자원이 풍부한 권위주의체제 국가는 빈자들로부터 혁명의 요구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재분배정책을 유지하여 비민주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함.

□ 현재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는 산유국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어, 공적개발원조의 사회개발측면은 소홀히 다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.

- 우리나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원유생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공적개발원조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.

3. 요약

□ 본 연구는 일반적인 관념과 달리 소득수준과 민주화가 단선적인 관계에 있지 않고 부존자원 여부에 따라 1인당 소득수준이 민주화의 주요 결정요인이 될 수도, 그러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줌.

- 부존자원이 있는 독재국가들은 소득수준이 민주화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, 그러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 소득수준의 증가가 시차를 두고 민주화 정도를 높임.
-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경제개발과 민주체제 확산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, 현재 자원부국(특히 산유국)에 배분되어 있는 지원액을 자원빈국으로 재조정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.